

건강한 勤勞者에 건강한 國家

● 사 회

조 규 상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 주제발표

- 직업병 예방대책
정 규 철 (중앙대의대교수)
- 작업환경관리
차 철 환 (고려대의대교수)

● 토 의

- 신 석 규 (노동부근로기준국장)
- 이 용 준 (한국노총사무총장)
- 황 정 현 (한국경총총무이사)
- 문 영 한 (연 세 의 대 교 수)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이다. 지난해 1년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불구·노동 불능을 합쳐 15만 6천 9백 72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엄청난 인력손실 외에 경제적 손실도 지난해의 경우 5천 8백 81억원에 달했다. 이는 83년도 GNP(국민총생산)의 1%에 해당하고 있으며,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데만 치우쳐 천대받은 산업안전과 보건문제가 점차 중요한 경제·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부와 노사·학계 관계자들을 초청,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

(1984.7.12 서울신문 보도)

▲曹圭常 근로자가 건강하다는 것은 곧 국가가 건강하다는 것과 통하지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발전 즉 생산성 제고에만 전력을 기울인 나머지 산업체의 재해예방이나 근로자들의 직업병 등 보건 문제는 등한히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산업도 이제 선진대열

에 진입하려는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과 보건문제는 노사 당사자는 물론 정부에서도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李龍俊 근로자의 입장에서 산업재해예방과 보건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고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이

같은 토의를 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15만 6천 9백 72명에 달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는 이웃인 일본에 비해 4배나 높은 재해율이고 전체 근로자와 산업시설을 감안한다면 비교도 안되는 재해율이죠.

작년 産災피해 16만명

재산손실도 6천억원

이런 재해발생을 근로자 과실로 돌리려는 경향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재해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사업주의 인식부족에서 초래되는 시설투자의 미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가 총생산비투자의 3.5% 인데 비해 우리는 0.5% 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黃正顯 솔직이 말해서 70년대 말까지는 생산성위주의 산업운영으로 산업재해나 근로자 보건문제는 중요시 되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의 가치가 올라가고 산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주들도 재해예방과 근로자 건강을 비롯한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요즘은 위험한 작업환경이라든가 근로자복지를 등한히 하는 사업장엔 근로자들이 취업을 꺼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들도 이제 다투어 안전시설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曹圭常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입장은 서로 시설부족이다, 근로자과실이다로 재해발생요인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정부차원에서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노사가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龍俊 산업발전과 함께 재해도 최근엔 발생했다 하면 대형이며 근로자의 피해도 치명적인 경우가 많지요.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레스의 경우, 최근엔 적외선 감시장치가 있어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손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작동이 중단됩니다.

이 시설은 기본시설투자에서 10% 정도만 사업주가 더 투자하게 되면 갖출 수 있는데도 이것을 외면하니 안타까운 일이죠.

가령 이 10%의 투자를 외면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불구가 되고 사업주는 피해보상도 해야하며 기능인력도 잃게 돼 다 같이 손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손실이 고요.

▲黃正顯 재해발생은 비교적 영세사업장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사업주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부의 지원도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산업안전 시설투자에 노동성이 40%를 부담하고 있지요.

또 정부차원의 산업재해예방과 보건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겠어요.

▲申昔奎 며칠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제 17회 산업안전보건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가 산업안전과 근로자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산업재해발생이나 근로자들의 직업병 발생은 노사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하고 예방도 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입장에서 보면 사업주측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령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이 발생했거나 우리가 있다고 진단된 사람은 작업환경을 바꿀 권리가 있고 당분간의 휴식과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은 건강진단결과 지병이나 직업병이 드러나게 되면 해고가 될 것이 두려워 오히려 이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들이 이들을 보살피고 철저한 치료와 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이런 현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택시운전사들의 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택시운전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최소한 18시간을 뛰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무얼하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정부는 노사가 다

같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펴지만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이 시책을 따라주지 않아요.

한정된 인력으로 각 사업장마다 다니면서 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도 없구요.

▲文榮漢 산업재해나 보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현실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발생이나 요인에 대한 분석기관 하나 없고 주먹구구식입니다.

인간의 감각이나 주의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사람에 따라, 일에 따라 피로, 권태 등 작업능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소음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열마만에 어떤 휴식이 필요하고 분진이 일어나는 작업환경은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는 모델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우리의 산업재해 대책이고 예방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너무 정부에만 의존하는 것같지만 노사의 노력과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광산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와 치료 종결때까지의 기준도 없고 산재보상에서 재활이나 회복률을 어디까지로 하느냐는 모델도 없어요.

이런 것은 정부가 철저한 연구 끝에 세부적인 모델을 설정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장의 투자비율도 법으로 규정했으면 합니다.

▲曹圭常 우리나라는 지금 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독극물 제조나 납, 석유화학제품 등 극히 일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만 직업병 발생 우려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별로 유해부서는 어떻게 위험한 사업장 근로자수는 몇명인지 현황도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은 역시 정부가 맡아서 추진, 새로운 시행령 등을 제정해야 노사간의 협력을 꾀할 수

있고 정부의 감독도 실효를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李龍俊 산업재해는 제조분야 보다는 건설이나 설비분야가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사업주에 협조하는 자세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시설투자

“防災에 지름길 없다” …施設투자뿐

에 인색하지 말고 정부에서는 각 사업장 안전관리자들을 교육시킬 교육센터 등도 마련해 주어야겠습니다.

▲黃正顯 지난해 1년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년에 1백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기업체 60개씩이 도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주들에게 이 같은 점을 인식시키고 안전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文榮漢 연간 산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15만여명이 넘는 데도 이 부분은 소홀히 하고 전염병 등에 의한 몇명의 사망은 난리가 난 것처럼 야단들입니다.

이 같이 엄청난 인명,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과 보건에 노사정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겠습니다.

▲申昔奎 우리나라의 산재피해는 GNP의 1%에 달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지 말고

사업주는 안전대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몇몇 대학에 인간공학을 전공하는 학과를 신설,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과 보건을 다루는 교육센터는 건립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입법사항으로 해야 할 일부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에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갈 방침입니다.

사업주들에게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기업에 있어서 안전은 정말 제일의 과제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산재는 사업주 책임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기업주의 이해가 있어야겠습니다.

<정리 = 김영조기자>

